

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 확정 '중앙회장' 187만 조합원이 뽑는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직선제 도입 조합장 간선제 조합원 직선제 전환 동시선거로 선거비용 부담 줄이기로 무자격 조합원 정비·자격관리 강화 정치화 우려엔 견제장치 보완 추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직접 중앙회장을 뽑게 되며 2028년 3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그간 조합장 직선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집중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농협개혁 추진단 역시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선출 권한을 기존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187만 명 조합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는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복수 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규모다.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선거 비용은 현행보다 350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달 31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조합장들이 중앙회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 48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



강호동(오른쪽 3번째) 농협중앙회장 및 임원들이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환될 경우 비용은 약 170억~1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선거' 형태로 진행된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년 후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되, 차기 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되는 권한 집중과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우선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도 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무보, 루마니아에 9억유로 금융 지원

한국 기업 방산 수주 발판 마련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루마니아 재무부에 9억 유로(약 1.5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은 수출·해외투자신(新)시장을 모색하던 무보와 재정 조달경로 다변화를 추진하던 루마니아가 금융 협력에 합의하며 추진됐다.

루마니아는 이 자금을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방산물자 조달 등 국책 프로젝트 계약 이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금융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무보는 2020년부터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요 발주처에 선금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UAE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ADNOC에 20억 달러 규모의 선금융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방산 등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금융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상반기 860명 신입 공개채용

지원서 오는 7일까지 접수

농협중앙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내걸고 올해 상반기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 8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채용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4월7일까지 온라인으



서울 중구 소재 농협 본관.

로 받는다. 이후 5월17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6월2일 면접을 거쳐 6월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AI 수질 예측 시스템 도입

현장 대응 효율·방제 비용절감 기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교하고 신속한 녹조 대응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수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가 강수량, 수온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해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체계다.

공사는 수질 데이터 52만여 건과 기상 데이터 64만여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예측 결과와 실제 측정 자료를 교차 검증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수질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현장 예찰을 줄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녹조 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방제 작업을 실시해 투입 인력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과학적인 농업용수 수질 관리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농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용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

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지에 영양염류(질소, 인)가 유입되고 수온이 높아지며 녹조 발생 빈도가 늘었다. 실제 2024년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발령한 전국 농작물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882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해 '녹조 예찰 강화 기간'을 지정하고, 3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현장 예찰과 수질자동측정센서 운영을 병행했다. 녹조가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 차단과 화학적 제거를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간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번 AI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전, 베트남 원전 공급망 구축 시동

PVN과 공급망 협력 세미나 개최
팀코리아 총출동해 전 주기 협력 제시
베트남 원전 수주 기반 선점 나서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협력해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산업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봉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 중인 항만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승훈 한국전력 해외원전개발처장(뒷줄 왼쪽에서 9번째)과 레 마잉 끄영(Le Manh Cuong) PVN 부사장(뒷줄 왼쪽에서 8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월 31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 TSC, VSP, Petrocons, PV Power, V 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팀코리아는 세미나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에 걸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우선 참여 가능 분야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정부의 원전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원자력 평화적 개발·활용 전략과 2050년 비전(결정문 제438호)'을 발표하고 원전 부대시설 건설 및 설치 시 자국 기업 참여 비중을 전체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정책 발표 이후 PVN과 신속히 공급망 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향후 원전 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